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ug. 2019

Vol. 32

8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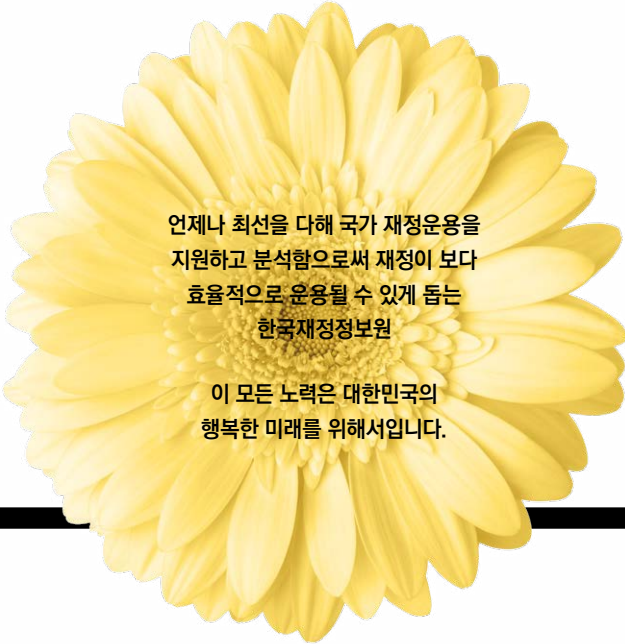
재정 Talk Talk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가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 | 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① 기금평가의 활용 및 시사점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② 국고보조금 정보공시제도 운영 현황
윤정수 e나라도움운영본부 차장
김동현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

16 재정칼럼

- ① 재정집행 부진사유와 개선방안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②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26 톺아보기

재정집행

재정
NOW

2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① 최근 재정통계
- ② 분야별 통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0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차별

44 해외재정동향

2019년 미국의 장기재정전망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재정
STORY

50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약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54 재정 Talk Talk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

56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중세 이슬람 상인,
광대한 유라시아 무역망을 형성하다

60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 관료는 최대한 지켜라!

64 KPFIS의 서재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

기금평가의 활용 및 시사점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kkim@kpfis.kr)

기금은 예산과 더불어 국가 재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 규모가 총지출 기준 130.8조 원으로 국가재정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총 67개 기금, 633조 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출연금이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구성되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금은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기금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금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01

기금의 정의와 현황

기금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및 운용되는 것”이다. 조세에 기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적 재정운용의 목적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운용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재정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기금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무분별한 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국가재정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주(主)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되어 신축적, 탄력적으로 지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 1. 2019년 재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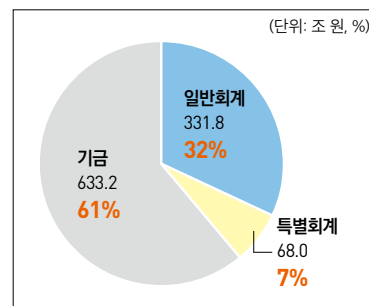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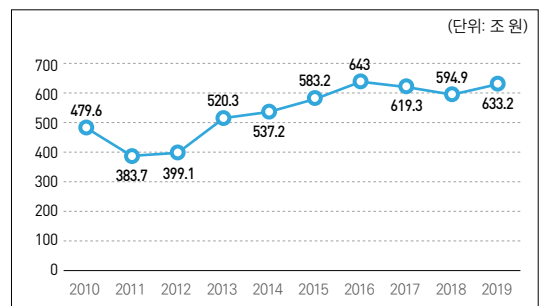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도는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의 운용규모는 2019년 총계 기준으로는 전체 국가재정 1,032조 원의 약 61%의 비중으로 총 67개 기금, 633.2조 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총지출 기준으로는 469조 원 중 131.8조 원으로 약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의 변동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로 인한 긴축재정 시기였던 2011~2012년도를 제외한 최근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기금운용총액을 세부 내역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내부거래



¹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표 1. 유형별 기금지출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금 운용 규모	615.3	594.9	633.2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117.7	124.5	131.8
내부거래	292.4	244.7	271.2
여유자금 운용	205.2	225.6	230.2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예산개요」, 2017-2019.

를 제외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운용 부문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기금은 그 목적과 정책적 분류에 따라 사업성기금, 사회보장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 등 4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총 67개의 기금 중 48개의 기금이 129.5조 원 규모로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과 보험료 등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188.1조 원 규모 6개이다. 금융성기금은 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의 보증과 같은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26.2조 원 규모 8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계정성기금은 특정자금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등 총 289.2조 원 5개로 구성되어 있다.

02

기금 평가제도

기금의 운용 평가에 관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금을 평가하는 제도로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준치평가 두 가지로 존재한다.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의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용과 자산운용 두 부문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데 사업운용 부문은 부처별 자체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자산운용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한다.

사업운용 부문의 평가는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 결과, 가점으로 구분하여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에 기반한 문항과 가감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운용 부문은 기금 여유자산 운용의 실태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가 목적을 갖고 있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하며 기금별 존폐 기준은 「국가재정법」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 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규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03

● 최근 3개년 기금평가 결과 분석

표 2. 최근 3개년도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2017년 (52개 기금, 322개 사업)	59개	203개	60개
2018년 (54개 기금, 300개 사업)	46개	191개	63개
2019년 (54개 기금, 298개 사업)	51개	188개	59개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17-2019.

기금운용평가의 결과는 사업운영 부분의 경우, 기금 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이나 성과관리개선계획 중 선택하여 환류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활용이 권고되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대평가의 평가 등급 배분으로 대부분의 평가가 보통 등급을

표 3. 최근 3개년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 부문 평가 결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2017년	5개	12개	18개	2개	-	-
2018년	7개	10개	23개	6개	-	1개
2019년	4개	7개	25개	4개	-	-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17-2019.

중심으로 매년 일정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산운용평가의 경우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6단계의 평가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중간 등급인 우수와 양호 위주로 평가 등급이 나타났다. 하위 등급인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018년도 평가(회계연도 2017년도)에서 유일하게 금융위원회 관리소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 최하위인 아주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표 4. 최근 3개년도 기금존치평가 항목별 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선	10개	9개	6개
	통합	3개	2개	4개
	폐지	-	-	2개
재원구조의 적정성	부적정	3개	1개	5개
	과다 및 과소	14개	8개	7개
기금존치의 타당성	조건부 존치 및 폐지	-	2개	2개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7-2019.

기금존치평가의 경우 평가 목적에 따르면 기금의 목적과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 타 기금에의 통합 의견이 나올 경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존치평가 결과 활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종 연기금과 같이 운용성적이나 목적상 실질적으로 폐지가 어려운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평가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 권고 이후 실제로 기금 폐지로 이어진 경우는 2004년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2009년 국가장학기금 폐지 정도로 매우 드물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령폐지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고 여러 이해관계 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으며 기금 수혜의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의견 개진

으로 정책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자산운용평가에서도 아주 미흡을 받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에는 2019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의 기금 유지 요청과 이해당사자인 농어업민의 의견 수렴 과정 부재로 거센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또한 이미 2007년에 한차례 폐지 권고를 받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평가단은 2022년까지 조건부 존치 의견을 내면서 비슷한 기능을 갖는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권고하였으나 이 역시도 지역신문 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04

시사점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지양하고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가 실시된지도 20년 가까이 지났다. 기금존치평가와 같은 기금평가가 반드시 기금의 수를 줄이거나 운용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20여 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운용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평가제도의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연기금과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은 적립성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운용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만 정책적 환경 변화와 목표 달성에 따른 일몰이 고려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신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기금 평가제도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치지 않고 평가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제도의 개편, 개선 방안과 평가 대상 기금의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개선 노력 제시, 이행 여부 등의 환류 여부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라는 기금평가제도의 실질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두 가지의 기금평가제도 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17-2019), 「나라살림(예산개요)」.
- 기획재정부 (2017-2019),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 기획재정부 (2017-2019),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02

KPFIS-인사이드

국고보조금 정보공시제도 운영 현황

윤정수 e나라도움운영본부 차장(jsyoon@kpfis.kr)

김동현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kimkim1208@kpfis.kr)

01

개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오픈하였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중복·부정수급 관리, 보조금 집행, 정산관리 및 보조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등이 전면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77.8

조 원으로서 2018년(66.9조 원)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02

● 정보공시제도 소개

국고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이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e나라도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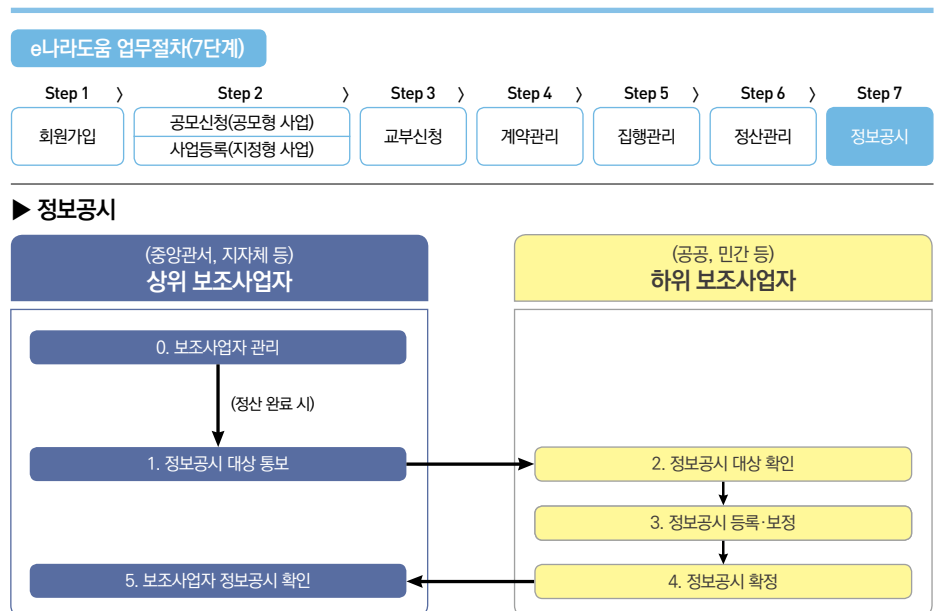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수혜 가능한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도 e나라도움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보공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보공시제도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포털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201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약 5만 2천여 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e나라도움 포털을 통해 공시되었다.

그림 1. 정보공시 업무흐름도



03

● 보조사업자 대상, 공시사항, 공시기한

1. 정보공시 대상

정보공시 대상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이다.

※ 보조금법 제26조의3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 '17년 정보공시 대상 사업: 45,665건, '18년 정보공시 대상 사업: 58,710건

참고

총액 1천만 원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 기준이다.

예시

○ A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3월 1일~2월 28일이다. A보조사업자는 2018년 3월에 7백만 원, 2018년 10월에 8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동일 회계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에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합계가 15백만 원이므로 정보공시 대상이다.

○ B보조사업자는 2개의 부처로부터 각각 5백만 원, 6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합계가 11백만 원이므로 정보공시 대상이다.

2. 정보공시 사항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⑥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⑦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특정사업자(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만 공시한다.

※ 보조금법 제26조의3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③,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③ 정산보고서
-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 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 ⑥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⑦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⑧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참고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공시사항을 공시하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정보공시 기한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일(사업연도 종료일~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국가의 회계연도로 1월 1일~12월 31일이고,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 기간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②,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참고

감사보고서에 관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되, 감사보고서에 한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공시한다.

04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각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조치를 할 수 있는 정보공시 이후의 후속 업무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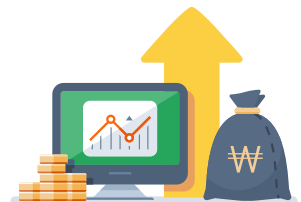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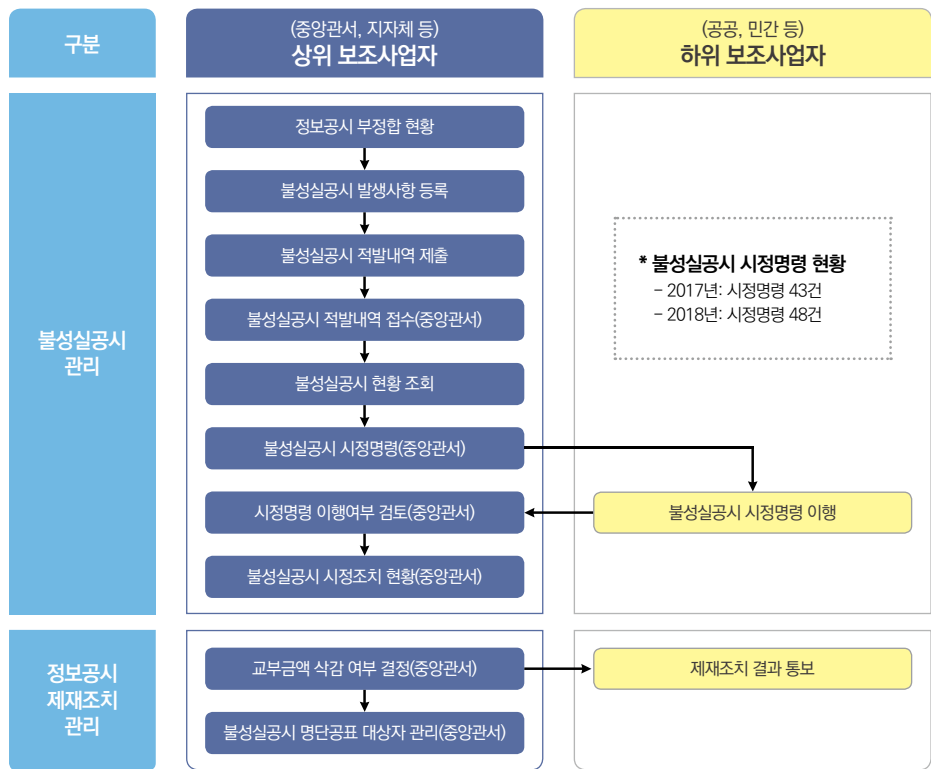


그림 2. 정보공시 사후 업무 프로세스



1. 불성실공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2.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공시불이행·허위공시 등 정보공시 대상자의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 시 서면(시정명령내용 및 시정기한 등 명시)으로 한다.

※ 보조금법 제26조의3②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④

3. 보조금 삭감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⑤,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표 1.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보조금의 삭감 범위

시정명령을 1회 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시정명령을 2회 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시정명령을 3회 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참고 불성실공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정명령 불응 시 시정명령 한 회계연도에 보조금이 삭감(50/100이내)될 수 있다.

05

2017, 2018년 정보공시 현황

2018 회계연도 정보공시 완료율은 공시 마감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6.3%p 오른 88.7%로 완료되었으며, 전체 대상사업 58,710건 중 52,088건이 e나라도움 포털에 공시되었다.

표 2. 2017·2018 회계연도 정보공시 현황

(기준일: '19. 4. 30.)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보조사업수	보조사업자(명)	보조금(천만 원)	보조사업수	보조사업자(명)	보조금(천만 원)
공시대상 (A)	45,665	20,988	1,268,838	58,710	27,367	1,935,926
공시완료 (B)	37,632	16,814	1,142,790	52,088	23,062	1,850,473
확정률 (B/A)	82.4%	-	-	88.7%	-	-

* 정보공시 마감일('19.4.30) 24:00 기준으로 최종 공시 확정 및 자료 추출

** 현재 기준('19.7월) 정보공시 확정률: 96.1%

06

맺음말



e나라도움 정보공시는 이제 3년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용자와 소통하며, 더 쉽고 간결한 프로세스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e나라도움은 앞으로도 정보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는 수행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조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e나라도움 정보공시로 거듭날 것이다.

재정집행 부진사유와 개선방안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ho@kyonggi.ac.kr)



01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도에 관리대상 총 280.2조 원 사업비 중 상반기 174.1조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8년도 추경예산이 5월에 국회에서 확정된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목표를 달성하였고, 연말에는 추경예산의 98.3%를 집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513.4조 원 중 상반기 308.3조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다만 올해의 추경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확정되어 집행이 지연될 경우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¹⁾.

정부는 재정 집행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Essay Sauce(2017), 아시아개발은행(2001), 세계은행(1988)에 의하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관리하면서 1) 총량적 재정준칙, 2) 배분적 효율성, 3) 운영의 효율성이 달성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총량적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지출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배분적 효율성이란 지출의 우선순위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절한지를 의미하고, 운영의 효율성은 지출의 적정성, 즉 비용의 효율성과 산출된 결과의 질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캐나다 정부 역시 지출관리에서 지출의 결과 평가, 지출의 적격성, 지출의 효과성, 효율성, 정합성, 우선순위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². OECD(2014, 2015)의 예산원칙에서도 재정집행의 계획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듯이 예산 집행률의 제고는 지출관리의 원칙에서나 예산원칙에서 중요한 지표임에는 분명하다.

2017년의 주요관리대상사업 소관별 집행실적을 보면 평균 96.2%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은 거의 100%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기획재정부 68.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3.7%, 중소벤처기업부 84.0%, 농림축산식품부 6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8년의 주요관리대상사업 소관별 집행실적을 보면 평균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전년대비 1.4%p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소관별로 보면, 교육부, 문화재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행정안전부가 거의 100%의 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소관별로 1월부터 12월(x축)까지의 집행률(y축)을 나타낸 <그림 1>과 <그림 2>를 볼 때에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률이 상승하여 조기집행실적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2017년 소관별 집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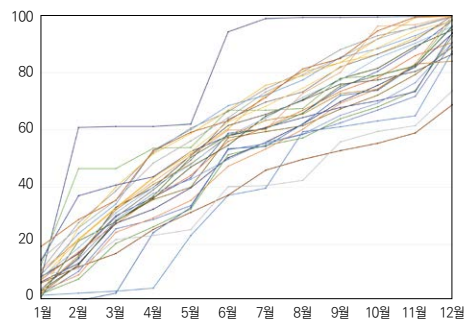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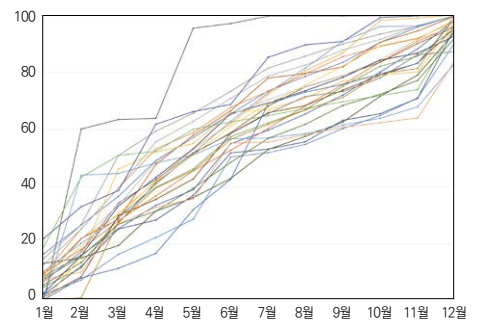


그림 2. 2018년 소관별 집행률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관리대상사업 소관별 집행실적

1. OECD국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은 보편적인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1번 밖에 하지 않아 추경편성을 적게 하는 곳으로 분류된다. <http://www.oecd.org/gov/budgeting/budgeting-practices-and-procedures-database.htm>(2019년 7월 19일 접속)

2.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lanned-government-spending/expenditure-management-system.html>(2019년 7월 19일 접속)

그러나 이러한 집행률을 실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018년의 경우 문화재청의 주요관리대상사업으로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가 있는데 예산액은 568억 원이며, 민간과 지자체 보조사업비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277억,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213억 원이었다. 또한 문화재보수정비는 2,951억 원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9: 240, 243). 열린재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의 집행률은 5월에 이미 9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주요관리대상사업의 실행집행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365에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최종 지출에서 추출하여 본 결과 문화재보수정비 관련 총 예산편성액은 1,963억 원으로 국비총액은 1,364억 원이며, 도비는 338억 원, 시군구비는 256억 원이 편성되었고 총 지출은 1,391억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70.9%로 나타났다³. 따라서 국비 잔액은 3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화재보수정비와 관련된 2018년 지자체 세부사업 지출을 보면 예산 현액이 약 495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국비가 38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4억원, 시군구비는 58억 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비 증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필요한 변화도 발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산의 계획적 운용이 있었더라면 국비의 증가도 거의 필요 없었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실행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민간단체를 포함한 실행 하위기관까지 포함하여 내부통제, 사업관리, 지출관리, 보고, 영수증관리 사업 및 현금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실행 하위기관의 역량제고가 필수적인데, 사업수행 담당자의 회계시스템 공유를 통한 실시간 집행률 제고, 분기별로 세부사업, 내역사업 단위 계획대비 집행률 점검 실시, 현지확인조사,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외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사업관리 인프라 정비 추진 등으로 이러한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다.

흔히 발생하고 있는 예산집행의 장애요인인 토지매입 추가기간 발생,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지역 변경 또는 환경영향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사업지연, 무연묘 연고자 확인을 위한 추가 소요기간 발생, 공사비 초과 설계로 인한 추가설계 소요기간 발생 등에 따른 사업지연, 설계변경 소요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낙찰자 선정 잡음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례의 소개 및 홍보 역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³ 정부예산서와 지방재정365의 수치 차이, 1,000억 원은 중앙정부 예산서에는 문화재보수정비라는 단위사업 아래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라는 세부사업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연양성당 복원정비) 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정확히 추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코드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적으로 기록하여야 정확한 추출이 가능하다.



더욱이, 집행률 관리를 위해서는 집행률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소관부서별로 주요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회계별 구분에 의한 집행률 관리, 법정외무사업 및 재량지출사업 구분에 의한 집행률 관리, 자본 지출 및 경상지출에 의한 집행률 관리, 국가사업 및 보조사업 구분에 의한 집행률 관리, 목-세목 구분에 의한 집행률 관리가 필요하다. 회계별 구분에 의한 집행률 관리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집행률이 매우 높은 반면, 2017년에 낮은 집행률을 보인 회계를 보면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학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였고, 2018년에 낮은 집행률을 보인 회계는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범위의 확대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라면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집행률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PUBLIC FINANCE COLUMN

한편 무리한 집행을 제고는 재정지출 관리의 목표인 1) 총량적 재정준칙, 2) 배분적 효율성, 3) 운영의 효율성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무리한 지출을 막기 위하여 부처의 한도 초과 지출, 불용액의 이월 등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OECD 조사에 의하면⁴, 경상지출에 대해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4% 한도 내), 뉴질랜드(내각동의 필요), 스웨덴(3% 이내, 3% 이상은 재무부 승인, 10% 이상은 의회 승인)에서는 부처가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차년도에 지출을 줄여도 된다. 핀란드에서는 집행을 덜하고 차년도에 초과지출을 할 수 있다.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덴마크는 불용액이 차년도에 이월되며, 핀란드에서는 집행을 적게 하고 차년도에 초과지출을 할 수 있으며,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3~5% 이내, 3~5% 이상은 재무부 승인, 10% 이상은 의회 승인)에서는 부처가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차년도에 지출을 줄여도 된다.

자본지출의 경우 불용액의 이월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월되나 이월된 금액의 사용은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본과 포르투갈에서는 이월액의 한도는 제약이 없지만 승인이 필요하다. 캐나다도 불용액의 일정부분이 재무부와 의회의 승인으로 이월되며,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일정한도 내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월된다.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일정한도 이내는 승인없이 이월되나, 한도 이상은 승인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한도 없이 또한 승인 없이 이월된다.

결국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집행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정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실집행기관의 역량제고, 재정집행 장애요인의 극복 방안 소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⁴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7F309CE7-61D3-4423-A9E3-3F39424B8BCA>(2019년 7월 19일 접속)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9).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9).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III」.
- Asian Development Bank. (2001). What is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PEM)? Governance Brief, Issue 1.
-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udgetary Governance.
- OECD. (2014). Draft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the Principles of Budgetary Governance.
- World Bank. (1998).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Handbook.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lshufo@hanyang.ac.kr)



02

들어가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 행복, 자아실현 등 국가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즉,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보건,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정부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에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며, 정부가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유효수요 이론(Effective Demand Theory) 이후 재정의 경제성장촉진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적기 재정집행의 중요성은 증가했으며,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조기집행을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적기 재정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재정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정부의 재정과정을 설명하고, 이후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과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예산(Budget)은 1 회계연도(우리나라는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정부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의미한다. 재정과정은 3년에 걸쳐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201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의 집행, 2020년 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의 4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과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국고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법률에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과 사업에 소요되는 가용재원을 화폐단위로 표현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권한은 행정부에 있고(헌법 제54조 제2항), 구체적 편성절차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편성절차는 ① 각 중앙관서장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제31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제29조), ③ 각 중앙관서장의 예산요구서 제출(제31조), ④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제32조), 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제33조)로 마무리된다.

둘째 단계인 예산 심의·확정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심사해 정부의 재정이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고(헌법 제54~56조), 구체적 심의·확정절차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의 구체적 예산(안) 심의·확정절차는 ① 행정부의 시정연설(제84조 제1항), ②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84조 제1, 5, 6항),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제84조 제2~6항), ④ 본회의 심의·확정(제84조 제2항)의 순서로 진행된다.



셋째 단계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실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기초하여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서 정한 금액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행위를 넘어 수입의 조정, 자금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채권발행, 세출의 변경, 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이다. 예산의 집행절차는 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고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등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집행은 ①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장에 예산 배정, ③ 각 중앙관서장이 사업부서에 예산 재배정, ④ 각 사업부서의 지출원인행위 실행, ⑤ 지출의 단계로 진행된다. 여기서 예산배정(재배정)은 예산집행기관인 중앙관서장(사업부서)에게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승인을 의미하고,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의 체결이나 물품의 주문 등 결과적으로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행위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기하는 행위로서 재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결산은 국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실행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집행결과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이 해제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결산절차는 「헌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감사원법」,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의 결산절차와 국회의 결산 심의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행정부의 결산절차는 ①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의 마감, ②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송부, ④ 감사원의 검사보고서 송부, ⑤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는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③ 본회의 심의·의결, ④ 정부 이송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정부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재정과정의 각 단계가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국가목적의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문서, 공공연구기관의 보고서, 학술논문, 언론보도 등에서 제시한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으로 재정집행 관리의 부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지체, 재정집행 전 행정절차의 지연, 사업



계획의 지체, 국고보조금 교부의 지연, 계약제도의 한계 등이다.

먼저 적기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업집행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보고서, 예산낭비신고시스템, 예산성과금제도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적기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월별 집행실적과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집행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의도한 효과가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가 지체되어 재정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지방재정법 제45조)의 활용을 통해서 적기에 재정집행을 할 수 있다. 성립전 예산집행제도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전액 교부 받거나 재해복구를 위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이후 집행된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셋째, 적기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복잡하고 다단한 사전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면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사업의 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늦게 진행되어 많은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관행적 행태로 인해 적기에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절차 지체로 인한 재정집행의 지연은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클로징 텐(Closing October)’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클로징 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사업을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교부를 지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업은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s)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에 대응하는 분담 지방비를 확보할 때까지 보조금의 교부를 지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한 적기 재정집행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검토하여 지방비 확보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이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 계약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의 지연이나 법률에 규정된 계약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기 재정집행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개산계약, 긴급입찰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계약체결의 지체로 인한 재정집행의 지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입찰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을 활용하면 전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산계약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완료 전에 설계가 완성된 부분부터 우선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개산계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계약체결의 지체로 인한 재정집행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맺으며

적기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사전행정절차의 면제나 간소화 등의 나머지 해결방안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전행정절차의 면제나 간소화,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개산계약, 긴급입찰 등은 일반적인 재정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나 확대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클로징 텐과 같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적기 재정집행은 빨리 재정을 집행하여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재정을 공급하여 적시에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의 구체적 수단들이 적기 재정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물품을 과다 구매하거나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고, 미리 예산을 집행하여 실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적시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재 정 집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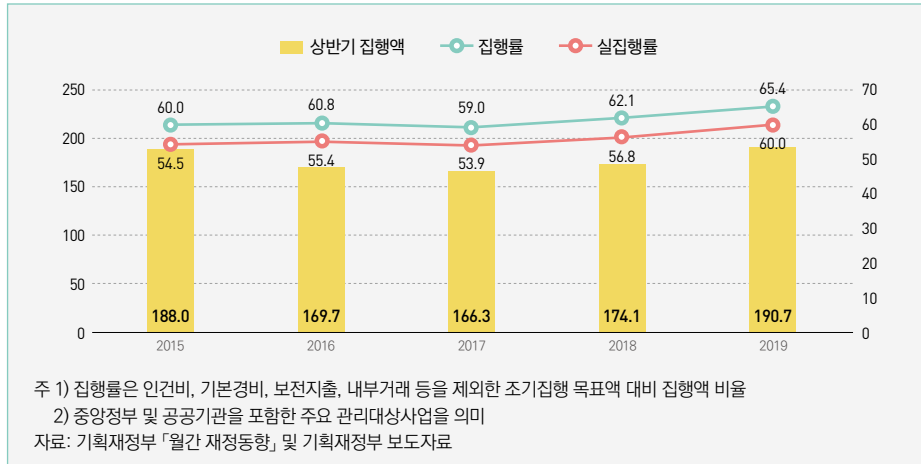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 상저하고(上低下高)형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조기재정집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재정의 경기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해 강도 높은 조기집행이 추진되어 2019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65.4%, 지방재정의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실집행률 또한 60.0%로 최근 5년동안 최고치를 기록
- 상반기 조기재정집행을 위해 정부·지자체 계약의 선금지급 확대, 총사업비 및 이·전용 신속협약, 보통교부세 조기배정, 적극적 조달업무 등을 추진
- 연간 집행 목표액이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집행관리를 통해 상반기 집행을 또한 2015년 60.0%에서 2019년 65.4%로 증가

그림 1. 연도별 집행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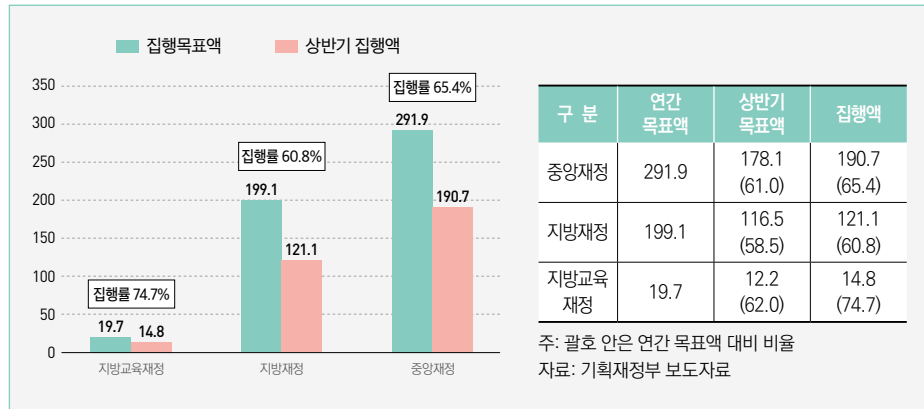
(단위: %, 조 원)



□ 2019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65.4%, 지방재정 60.8%, 지방교육재정 74.7%로 모두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 달성

그림 2. 2019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

(단위: 조 원)



□ 2019년 5월 기준으로 일자리사업의 집행률은 62.1%(13.4조 원 중 8.3조 원을 집행), SOC사업은 52.6%(총 19.4조 원 중 10.2조 원 집행),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53.4%(총 8.6조 원 중 4.6조 원을 집행)의 집행률을 보임

표. 주요 사업의 집행률

(단위: 조 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일자리사업	13.4	8.3	62.1
SOC사업	19.4	10.2	52.6
생활밀착형 SOC	8.6	4.6	53.4

주: 일자리사업은 전체 일자리사업(22.9조 원)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정부는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아일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집행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추경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집행 추진, 주 단위 실적점검, 월단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맞춤형 집행방안 마련 등 집행관리 추진
- 출자·출연사업 및 사업준비절차 완료 사업 등은 자금배정 후 즉시 집행할 계획이며,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트랙방식(정책지정 등)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 추진
- 공공기관의 조기집행을 위해 출자 사전협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 추진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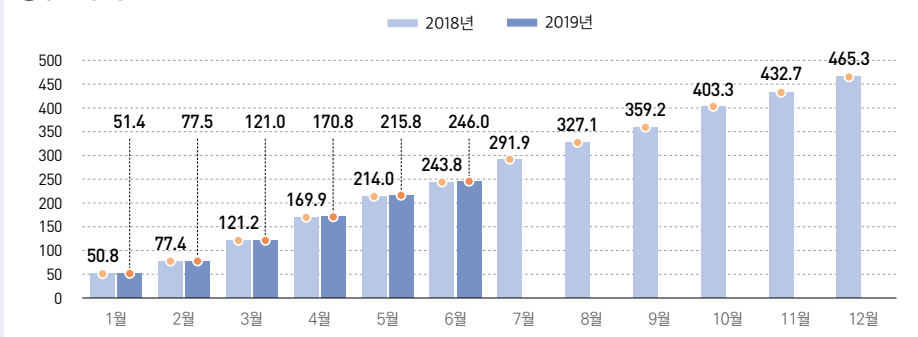
2019년 6월 중 총수입은 30.2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4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 증가하였다. 진도율¹은 전년 대비 0.7%p 하락한 51.7%이다. 이는 국세수입 156.2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 세외수입 14.1조 원(전년 대비 0.6조 원 감소), 기금수입 75.7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총수입

246.0조 원

총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019년 6월 중 국세수입은 16.7조 원(소득세 7.0조 원, 법인세 2.7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5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 세수진도율은 53.0%로 2018년 결산 기준 진도율(53.5%) 대비 0.5%p 하락하였다.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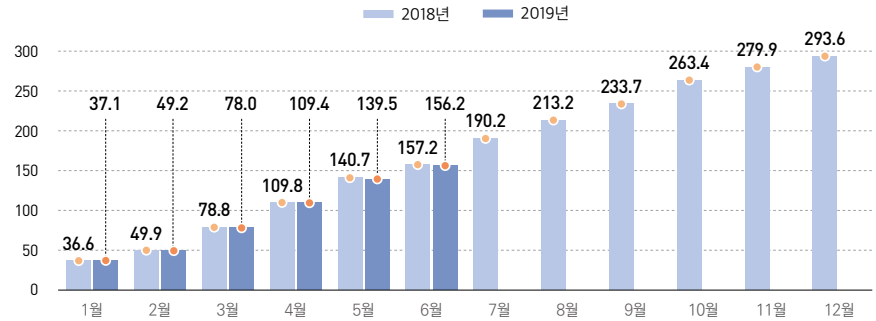


국세수입

156.2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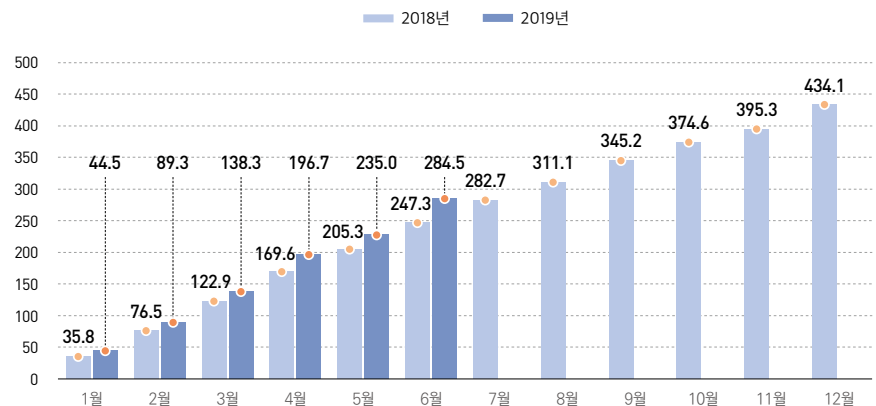
2019년 6월 중 총지출은 49.6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284.5조 원이다. 진도율²은 60.6%로 전년 동기 대비 3.4%p 상승(37.2조 원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20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2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7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

284.5조 원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²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³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6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166.2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65.8%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138.3조 원(연간 계획 대비 66.2%), 40개 기금에서는 27.9조 원(연간 계획 대비 63.8%)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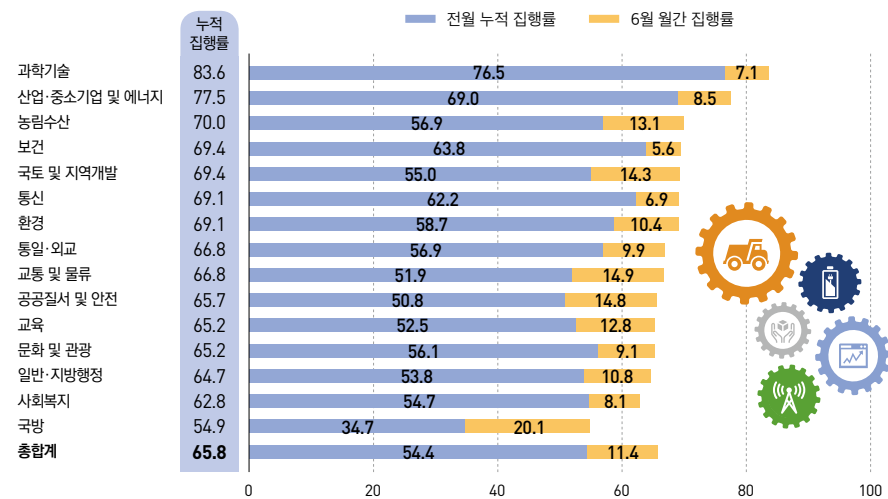
6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8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7.5%), 농림수산(70.0%), 보건(69.4%)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54.9%), 사회복지(62.8%), 일반·지방행정(64.7%)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6월 월간 집행률은 11.4%이며, 분야별로는 국방(20.1%), 교통 및 물류(14.9%), 공공질서 및 안전(14.8%), 국토 및 지역개발(14.3%)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65.8%
월간 집행률
11.4%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수지

2019년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8.5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1.0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9.5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5.0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34.0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기인한다.

³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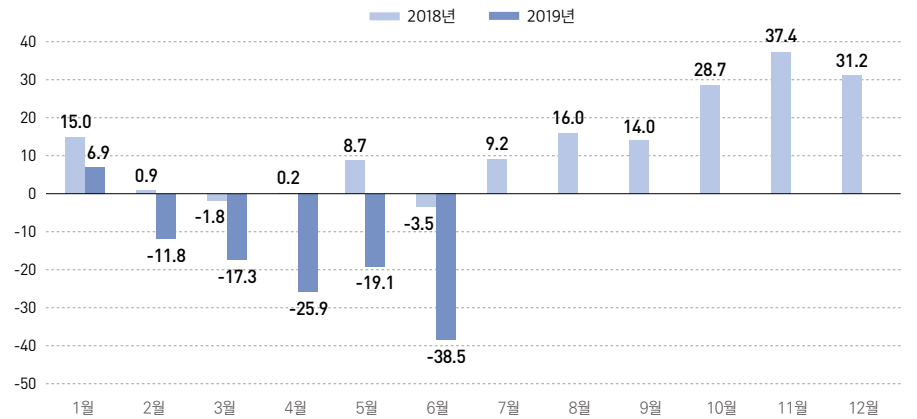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38.5 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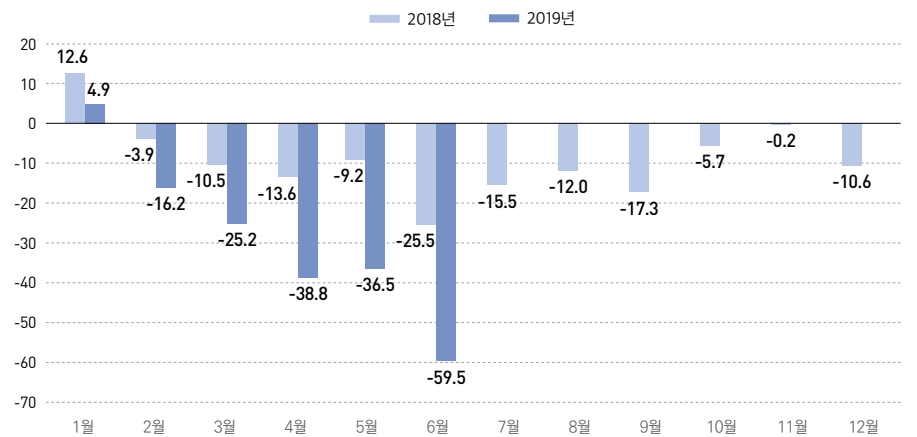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관리재정수지

59.5 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중앙정부 채무

2019년 예산 상 중앙정부 채무⁴는 711.1조 원이며, 6월 말 현재 686.9조 원이다. 이는 외평채권 잔액 증가(1.6조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1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1.5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2018년 결산 기준) 대비 35.1조 원 증가하였다.

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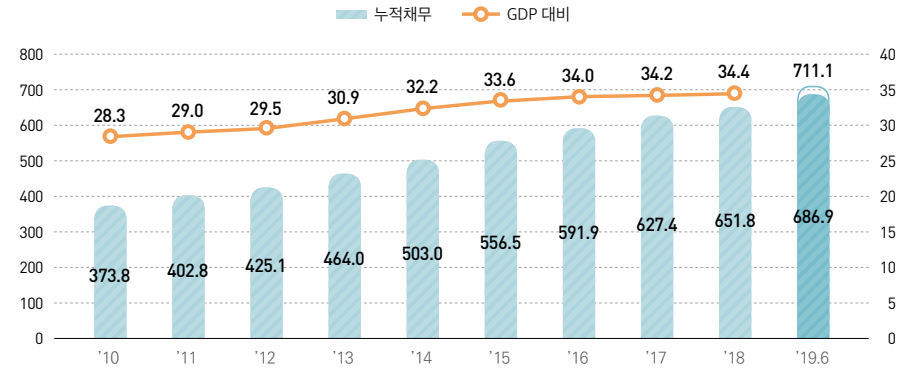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686.9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주: 1) 2019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19.6.4.)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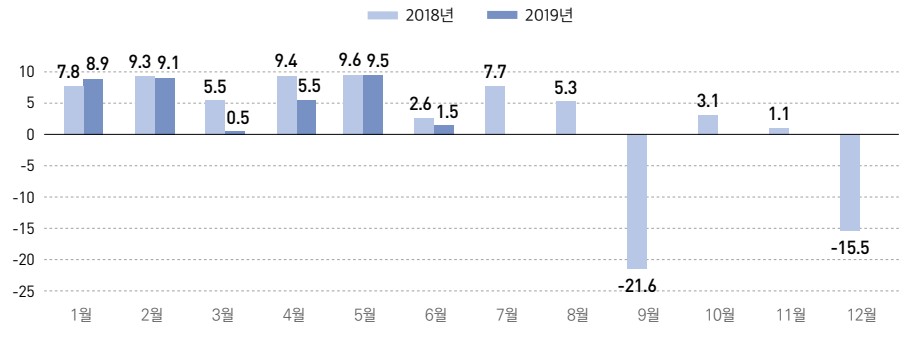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data.go.kr)

순차입 전월 대비

1.5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data.go.kr)

국유재산

2019년 6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5.8조 원으로 전월 대비 0.4조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재산⁵ 811.2조 원(전월 대비 0.4조 원 감소), 일반재산⁶ 274.6조 원(전월 대비 0.1조 원 증가)으로 구성된다.

⁵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⁶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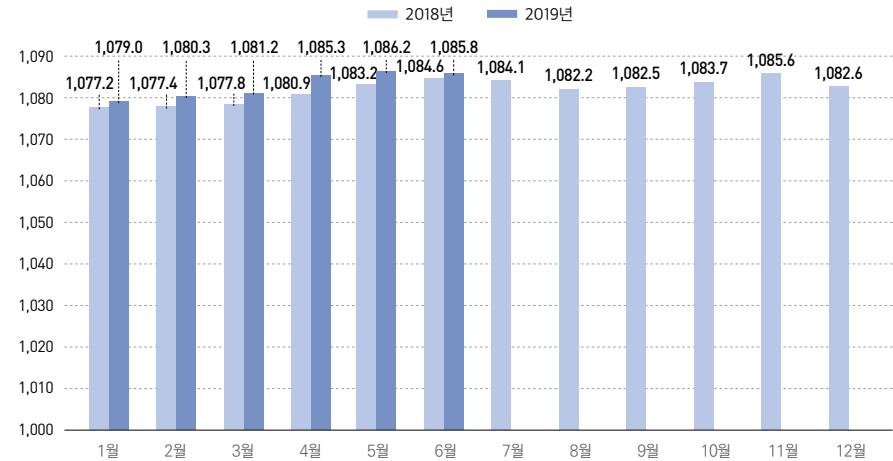


국유재산 현액

1,085.8 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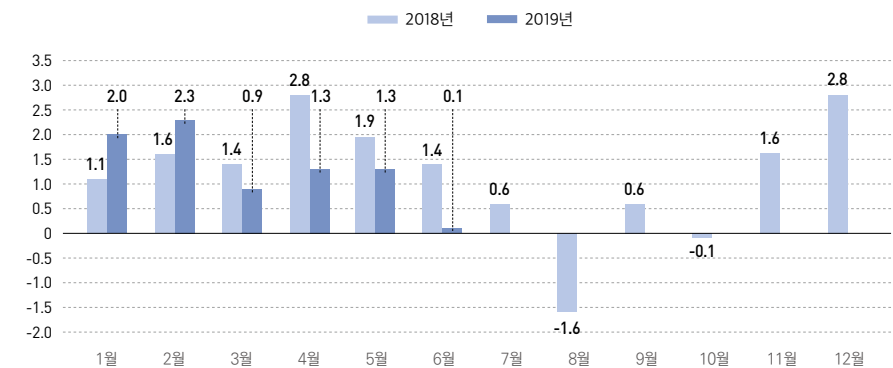
6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9,553억 원이며 전월 대비 4,737억 원 감소했다. 처분 총액은 8,486억 원으로 전월 대비 6,887억 원 증가하였으며, 6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1,067억 원 초과한다.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0.1 조 원

국유재산 취득·처분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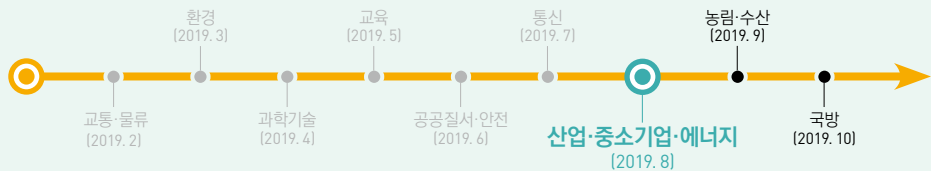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 분야별 통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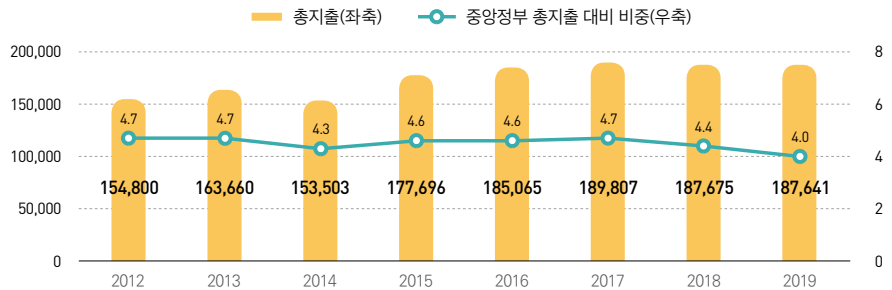
2019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지출은 18조 7,641억 원(총지출 대비 4.0%)으로 2018년(18조 7,675억 원) 대비 34억 원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8.8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일반회계 6조 2,420억 원(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총지출 대비 33.3%), 특별회계 3조 1,348억 원(16.7%), 기금 9조 3,892억 원(50.0%)으로 편성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특별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기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에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6.2조 원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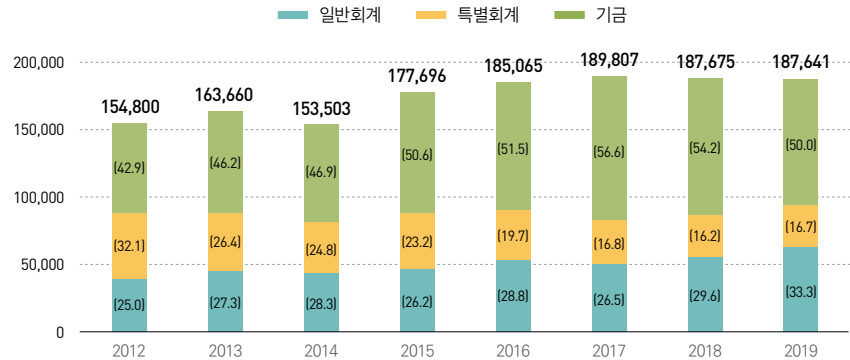
3.1조 원

기금

9.4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3조 1,348억 원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1조 3,515억 원으로(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43.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조 3,391억 원, 42.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4,442억 원, 14.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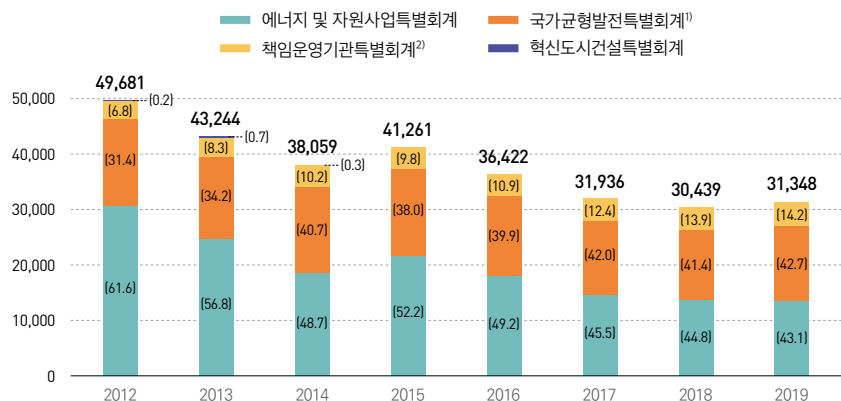
1.3조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특허청 포함

3)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4)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근거해 1995년 설치되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과징금·부과금·가산금과 용자 및 예탁금을 통해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출연·보조와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출자금·용자금 등으로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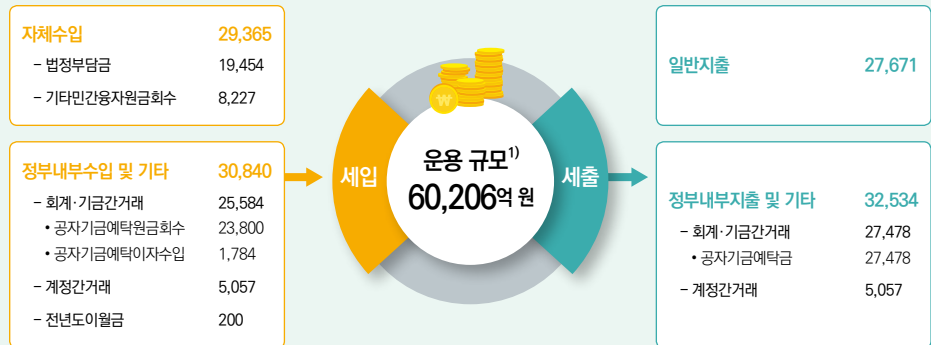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6조 206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2조 9,365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조 84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2조 7,671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3조 2,534억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특별회계 운용 규모

6.0조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9조 3,892억 원이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4조 5,562억 원으로(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기금 합계 대비 48.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조 6,212억 원, 27.9%), 전력산업기반기금(1조 9,251억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429억 원, 1.5%), 정보통신진흥기금(920억 원, 1.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519억 원, 0.6%)으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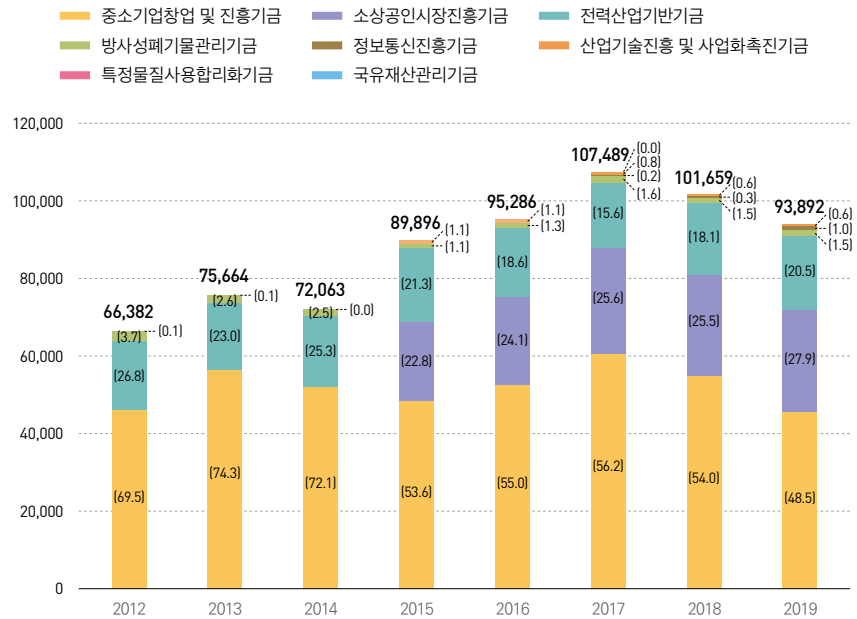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

4.6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78년 설치되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채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중소기업상담회사 자금지원,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사업전환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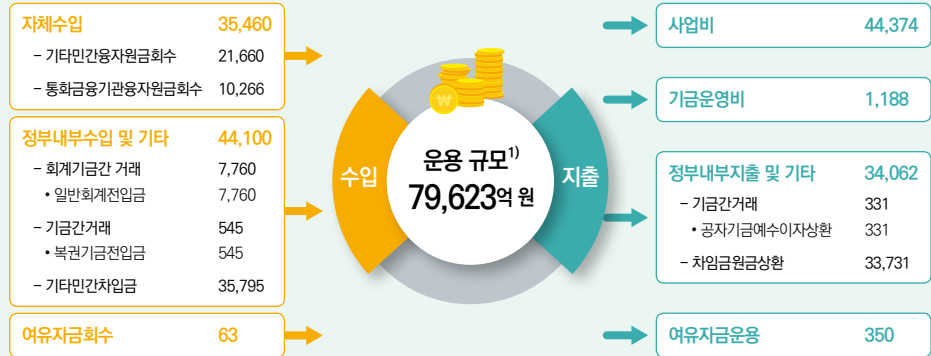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7조 9,623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3조 5,460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조 4,100억 원, 여유자금회수 63억 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사업비 4조 4,374억 원, 기금운영비 1,188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3조 4,062억 원, 여유자금운용 35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운용 규모
1.3조 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산업혁신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창업 및 벤처,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일반, 지식재산일반, 산업금융지원까지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으로 34.8%(6조 5,331억 원)를 차지하고, 산업혁신지원 부문 20.3%(3조 8,049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18.2%(3조 4,194억 원)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6.5조 원

산업혁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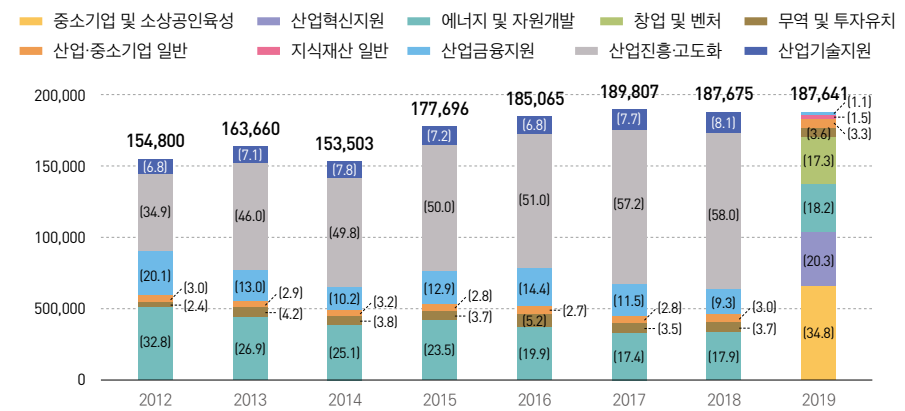
3.8조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3.4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업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R&D),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편성되었다.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

2.1조 원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조 800억 원)은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

0.3조 원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일반회계, 3,733억 원)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0.3조 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일반회계, 3,428억 원)도 지속 추진된다.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¹ 도입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생산방식을 확산하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사업

0.2조 원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사업(일반회계, 2,000억 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2조 원)을 지원하고, 신성장·혁신기업 투자자금 지원(1,000억 원)을 위해 정부예산 2,00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으며, 초저금리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신성장·혁신기업 투자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¹ 스마트공장이란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이 달의 이슈 키워드 「차별」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차별’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kr)



연관어

여성

외국인

미국

저임금

황교안

남성

범죄

혐오

차별

노동자

인권

시위

근로기준법

총기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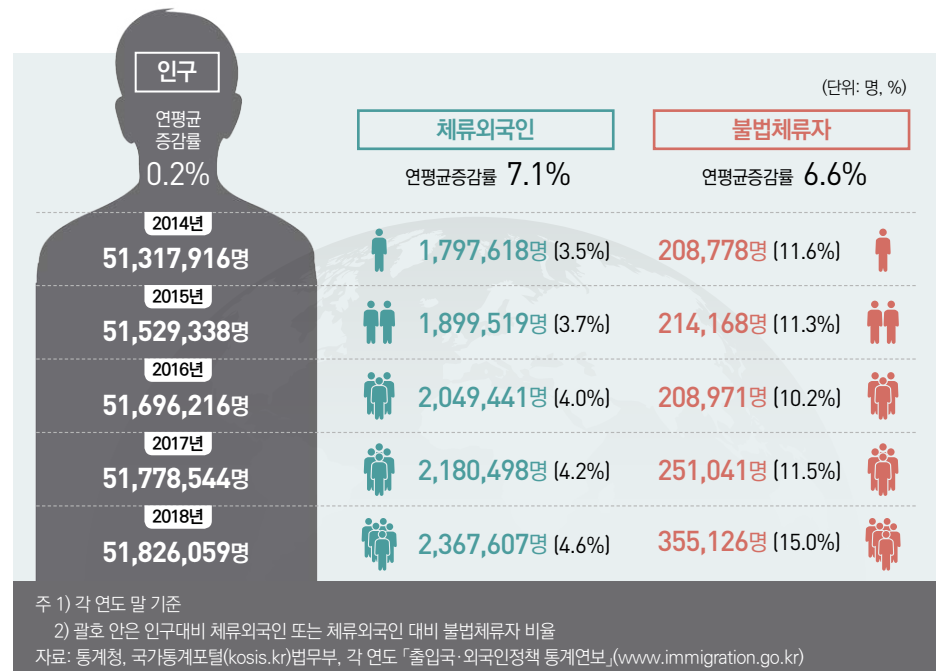
플로리다

교육

개선

장애인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2014년 1,797,618명에서 연평균 7.1%씩 증가하며, 우리나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1.1%p 증가하였다. 또한 체류외국인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역시 2014년 208,778명에서 2018년 355,126명으로 연평균 6.6%씩 증가하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서 15.0%로 3.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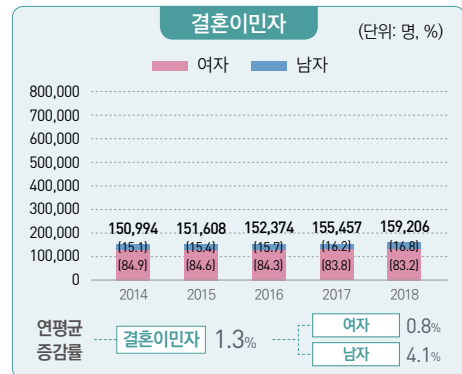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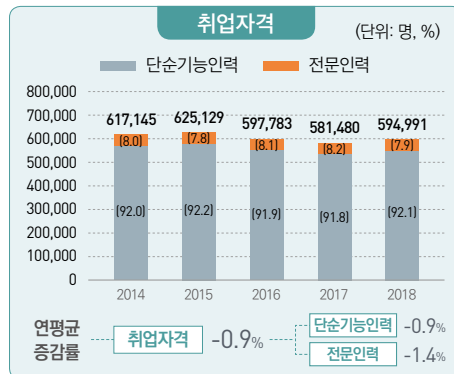


반면 취업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체류 자격별 증감 변화를 보면 사증면제(B-1, 93,619명→228,194명), 관광통과(B-2, 96,113명→149,474명), 단기종합(C-3, 146,357명→218,743명), 유학(D-2, 61,257명→102,690명) 자격 등의 관광과 유학 목적의 체류는 증가하였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은 2014년부터 연평균 0.9%씩 감소하며 체류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3%에서 25.1%로 9.2%p 감소하였다. 취업자격 중에서는 교수(E-1) 등의 전문인력¹ 자격 감소율은 연평균 1.4%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의 단순기능인력² 자격의 연평균 감소율 0.9%보다 0.5%p 더 컸다.

¹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등 8개 자격으로 구성된다.

²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3개 자격으로 구성된다.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³이 체류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14년 150,994명에서 2018년 159,206명으로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외국인 증가율(7.1%)보다 작아 체류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4%에서 2018년 6.7%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약 5.6배 많았지만, 남성 결혼이민자의 연평균 증가율(4.1%)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평균 증가율(0.8%)보다 높아 그 격차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



주 1) 각 연도 말 기준

2) 괄호 안은 취업자적 대비 인력 또는 결혼이민자 대비 성비 비율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9년도 체류외국인 관련 주요사업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의 체류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29억 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28억 원), 외국인력고용지원 사업(24억 원) 등이 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수급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내국인 일자리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고용 관계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력고용지원 사업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74억 원),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123억 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52억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887억 원) 등을 수행하며, 문화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은 체류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⁴과 다른 문화와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⁵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의료·법률 및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등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과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887억 원),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 등 걱정 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외국인보호관리 사업, 145억 원).

³ 체류외국인 중 F-2-1,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국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이수 시 귀화 필기 및 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⁵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우리 국민 중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를 소개하고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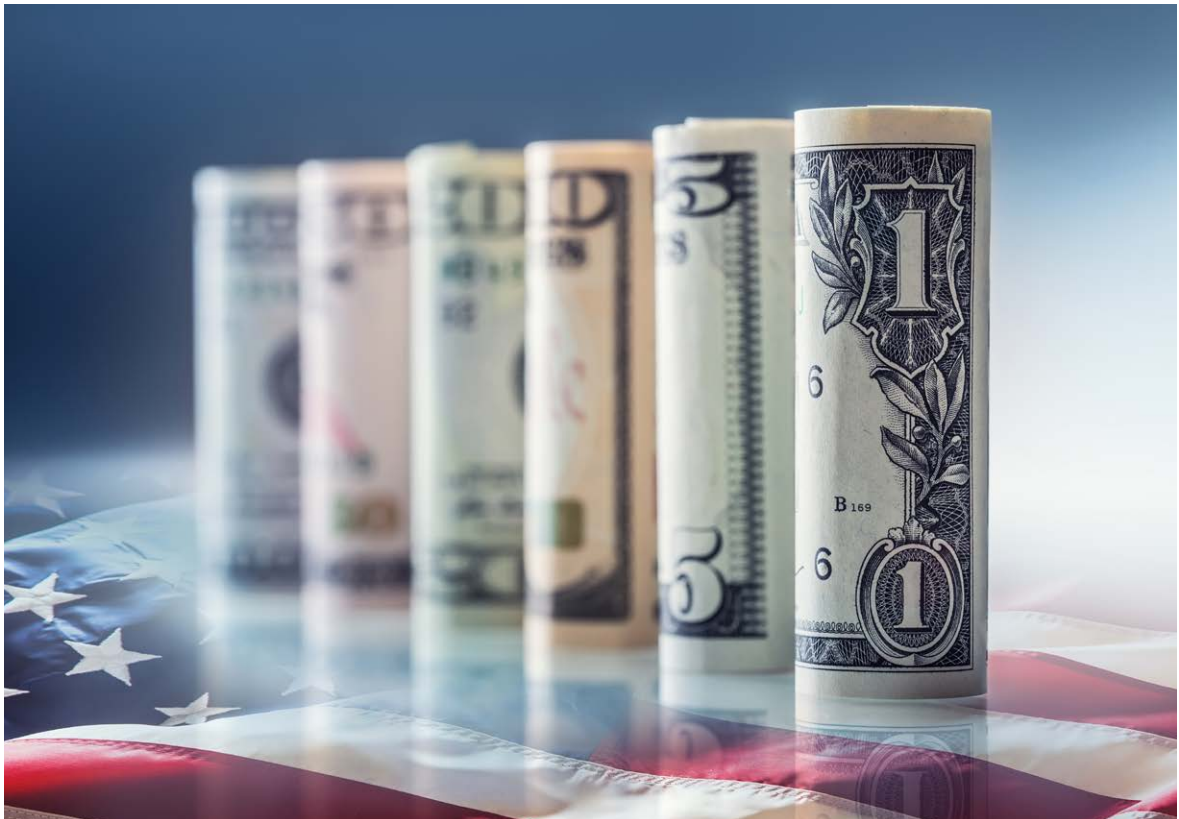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9년 미국의 장기재정전망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는 매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의 연방 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6월 발표된 「2019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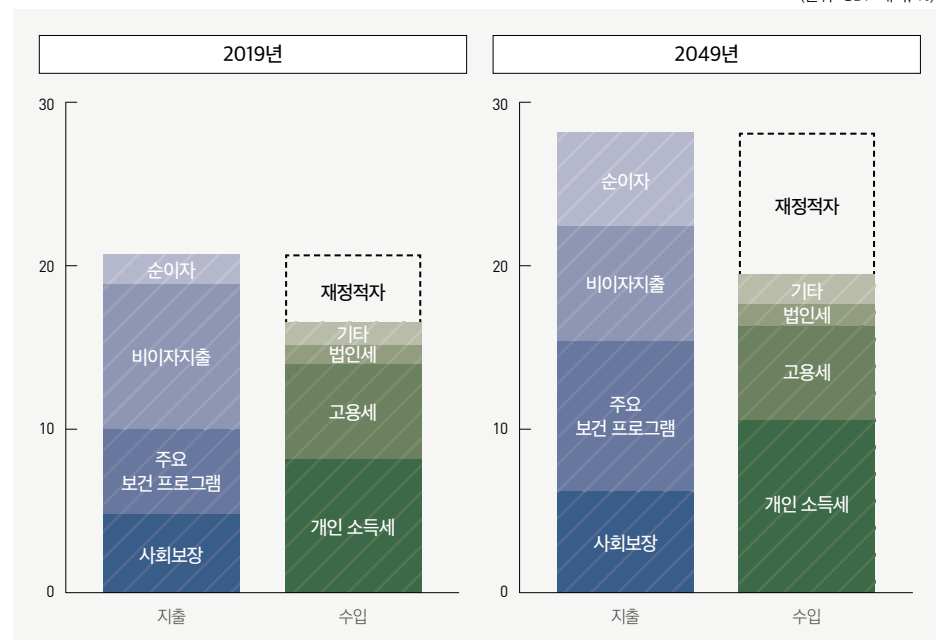




미국의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향후 30년 동안의 연방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 전망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2019 장기재정전망(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에 의하면, 현재의 법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정적자의 증가로 연방정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1>은 2019년과 2049년 지출·수입 전망을 비교한 것이다. 2019년 대비 2049년 GDP 대비 지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지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연방정부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된다.

그림 1. 의회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

<표 1>은 「2019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019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78%이다. 2029년 이후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0%에 도달하고, 2049년에는 144%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전 전망치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CBO는 설명했다.

표 1. 장기재정전망 주요 결과

(단위: GDP 대비, %)

	평균 전망치			
	2019	2020-2029	2030-2039	2040-2049
1. 총수입(Total Revenues)	16.5	17.5	18.5	19.2
-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es)	8.2	8.9	9.9	10.4
- 고용세(Payroll taxes)	5.9	5.9	5.9	5.9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es)	1.2	1.4	1.3	1.3
- 기타(Other)	1.3	1.3	1.4	1.6
2. 총지출(Total Outlays)	20.7	21.9	24.3	27.1
1) 의무지출(Mandatory)	12.7	13.9	15.9	17.1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4.9	5.5	6.2	6.2
- 주요 보건프로그램(Major health care program)	5.2	6.0	7.5	8.8
- 기타(Other)	2.6	2.4	2.2	2.1
2) 재량지출(Discretionary)	6.3	5.3	5.0	5.0
3) 순이자(Net interest)	1.8	2.6	3.5	4.9
3. 재정적자(Deficit)	-4.2	-4.3	-5.8	-7.9
4. 채무(Debt)	78	92	113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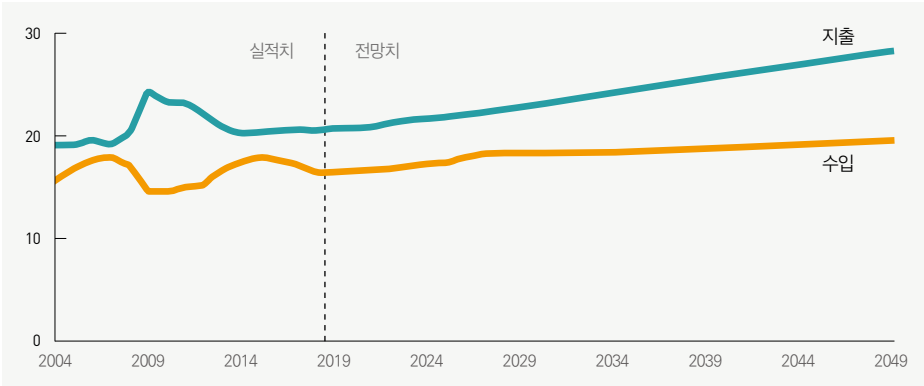
자료: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

재정적자의 증가원인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올해 GDP 대비 4.2%에서 2029년 4.5%, 2039년 6.8%, 2049년 8.7%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방정부 지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2>의 2019년부터 2049년까지의 수입과 지출전망 그래프를 보면,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일정기간 유지된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9년~2049년 수입,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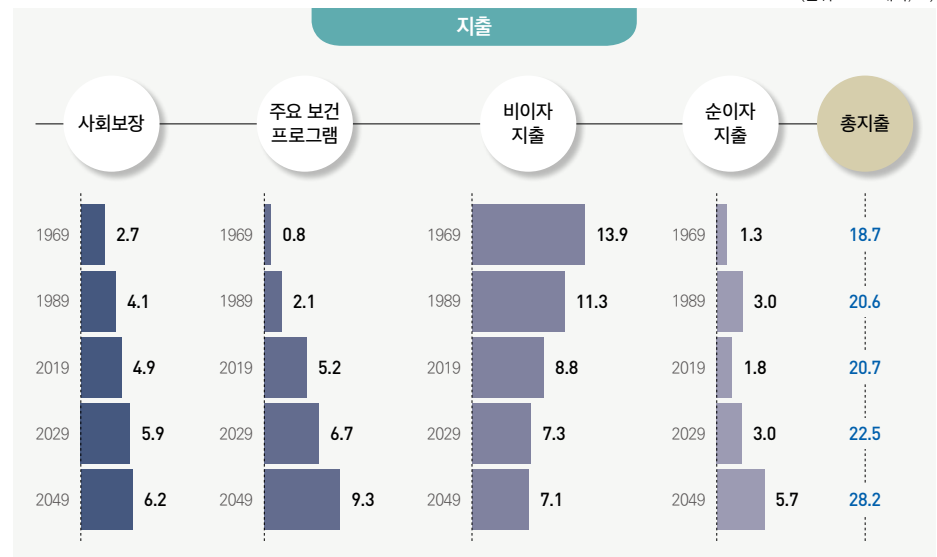


자료: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

CBO는 사회보장과 주요 보건 프로그램, 순이자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3)참고). 반면 사회보장과 주요 보건 프로그램, 순이자를 제외한 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와 주요 보건 프로그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베이비붐¹ 세대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사회보장과 보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보건 지출의 증가로 메디케어(Medicare)²와 주요 보건 프로그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방정부 채무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순이자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 지출 구성항목의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1935년에 시작된 연방정부 지출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그램이다. 노령·유족연금(OASI;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과 장애연금(DI; Disability Insurance) 수혜자는 2019년 64백만 명에서 2049년 97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지출은 2019년 GDP 대비 4.9%에서 2049년 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노령·유족연금 기금은 2032년에 소진되며, 장애연금은 202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¹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1946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한다.

²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이다.



주요 보건 프로그램(The Major Health Care Program)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으로 구성된다. GDP 대비 주요 보건 프로그램의 비중은 2019년 5.2%에서 2049년 9.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고령화와 1인당 보건 지출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19년 16%에서 2049년 22%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 프로그램 수혜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며, 지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 주요 보건 프로그램, 이자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회보장제도와 주요 보건 프로그램을 제외한 의무지출 비중은 2029년 2.3%로 감소하고 2048년까지 2.0%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GDP 대비 재량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감소하다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았다. 지난 50년 동안 GDP 대비 재량지출은 1969년 12%에서 2018년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CBO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2029년까지 5.0%로 감소한 이후 일정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수입은 지출과는 다른 전망을 보인다. GDP 대비 연방정부 수입은 향후 몇 년간 17.4% 내외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다가 2025년까지 17.4%로 꾸준히 증가하고 2029년에는 18.3%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2025년 이후 개인소득세율³ 감면 만료에 따라 연방정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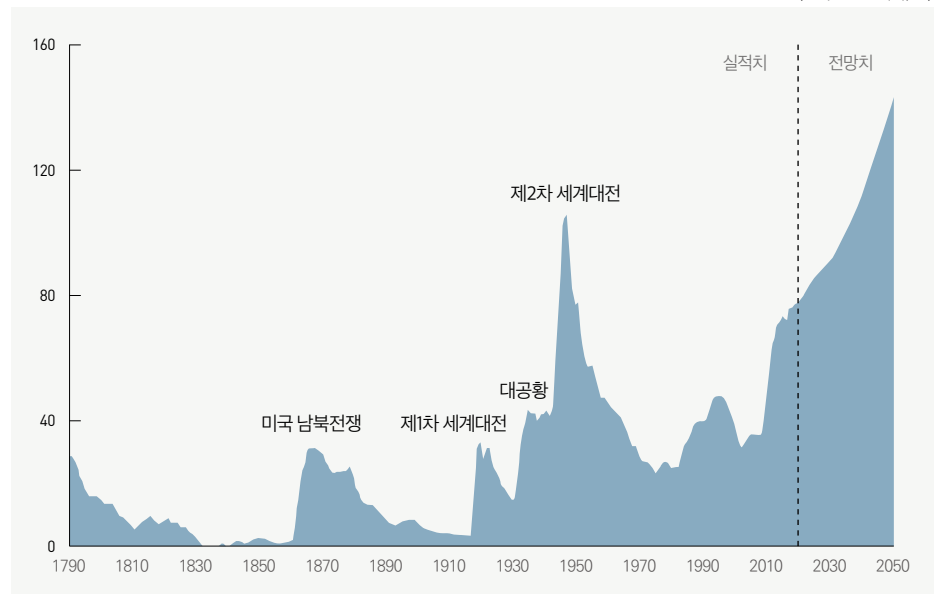
³ 2017년 12월 법률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을 의미한다. 이 법은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10%~39.6%(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 누진세 구조에서 10%~37%(10%, 12%, 22%, 24%, 32%, 35%, 37%)의 7단계 누진세 구조로 평균세율을 감소시키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의 개인소득세 규정 대부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일몰 규정인 반면, 법인세 규정은 일몰규정이 아닌 새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는 영구규정이다.

연방정부 채무 증가와 그 영향

의회예산처는 현재의 법률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채무 규모는 향후 30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4>의 연방정부 채무 추이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현재의 연방정부 채무비율이 78%로 가장 높다. 2007년까지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35%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금융위기로 70%까지 채무비율이 두 배 증가하였다.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2049년까지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9년에는 14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연방정부 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

정부채무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채무의 증가는 국가의 저축과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이자지출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에게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정부채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들이 미국 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급격한 정부채무의 증가는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채무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않지만, 급격한 채무의 증가는 재정위기의 확률을 높인다.



재 정 정 보 시 스 템 의 도 약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시스템구축과

이용안 과장



정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단을 꾸렸다.
재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 강화,
재정·수혜정보 통합공개,
연구자·일반국민 재정정보 활용
개선 등을 목표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최신
IT 기술을 적용해 현 시스템을
뛰어넘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구축과 이용안 과장을 만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추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담당.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kr)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재정업무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편성·집행, 수입·지출, 자금·조달, 채권·채무, 국유재산·물품,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 재정업무 전체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처리 및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 관련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분리되어 있던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업무적·물리적으로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라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이를 뛰어넘어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사결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개혁으로 이뤄졌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최신 IT기술을 적용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시스템구축과 이용안 과장은 1991년부터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여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용안 과장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주요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노후 시스템을 최신 IT기술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구축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기술 기반의 프레임워크(시스템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결산 업무 처리 기간인 12월부터 2월까지 처리속도가 저하됩니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화면의 크기는 14인치로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추가

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요. 이런 문제점들은 420여 개 사업에서 적용되어 확장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업무 집중기간에도 처리속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모니터 크기에 맞게 화면조정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안 과장은 두 번째 개선 방향으로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전산화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시스템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금 실적관리와 세외수입 징수관리 등을 온라인화하여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통계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이다. 이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주된 개발 목표이기도 하다.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통계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경제·재정운용의 방향성 판단을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서 각각의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재정정보 및 경제·행정통계를 통합 연계하고 사업 속성분류

체계를 정책 활용목적(사업유형, 수혜대상 등)에 맞게 개편하면 재정 의사결정 지원 및 재정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얻어진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수혜정보는 각각 열린재정, 지방재정 365, 교육재정알리미, 정부24를 통해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재정정보와 수혜정보를 모아서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면 국민이 원하는 사업정보와 수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의 용이성을 확보를 들 수 있다. “현재 예산과 회계가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도 구축 당시 모듈화를 염두해 수출의 용이성을 고려했지만, 오랜 시간동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기능이 개선되다 보니 모듈 간 결합도가 증가했습니다. 관심을 표명하는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부분 수정을 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관리, 집행관리, 회계관리 등 업무단위로 완전히 분리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모듈화는 수출에 용이한 동시에 부분적인 업그레이드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재정업무처리 시스템을 넘어 재정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도약

 Pin-Point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국가전체
재정정보
통합관리

 재정업무
완전 전산화

 4차 산업 혁명
기술

 완전한
모듈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세계 수준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리고,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의 노력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1단 3과 총 2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으로 재정업무의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은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발주,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테스트,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외에도 예산심의 및 결산 프로세스 개선, 사업별 시계열 유지 및 속성분류 체계 마련, 성과평가체계 개편 등 관련 재정제도의 개편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용안 과장은 재정정보 관리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재정정보·행정통계·경제통계 등을 연계하여 완성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이 한 곳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시뮬레이션과 예측정보 등을 제공하면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리고,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업무 담당자가 국가 재정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국민이 바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생산된 각종 정보를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알기 쉽게 통합적으로 확대 공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2022년 1월 오픈을 앞두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큰 혼란 없이 사용자들에게 자리 잡아 국가 재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새 프로그램 오픈으로 인한 혼란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kr)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 가능한 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빚을 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빚을 내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로 재정수입 범위 내에서 정부지출을 하지만 경기 침체나 재난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국가채무는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재정운용과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려, 국가부도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Fiscal Soundness)이란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¹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침체에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많고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빚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것처럼, 국가도 재정적자가 심각하거나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대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한 원동력 중 하나는 재정이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되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¹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정부의 채무수준이 현재 또는 미래에 상환이 불가능한 이자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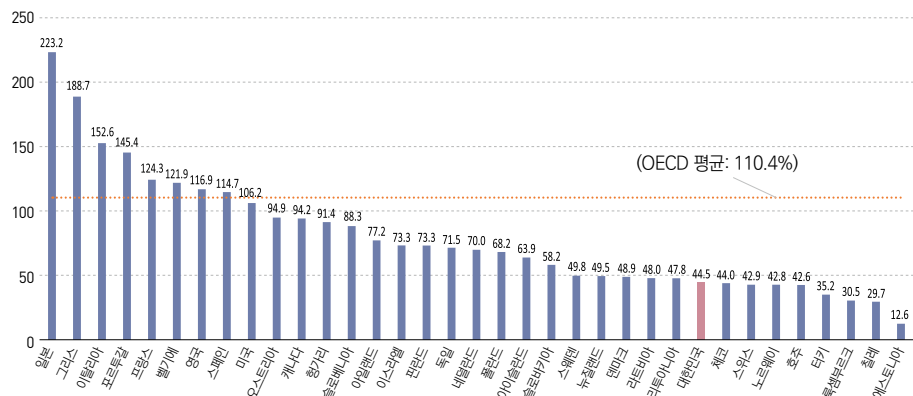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².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및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0.6%,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0% 수준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³ 비율을 보면, 평균 110.4%이며, 우리나라는 44.5%로 35개국 중 9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의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세입여건이 악화되는데 비해 복지지출과 같은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현황(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tatistics(stats.oecd.org), 2019. 7.

² 국가재정법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따른다.

³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2001년 버전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의 국제,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부채로,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 알-와시티, 『마카마트』, 1237년.

중세 이슬람 상인, 광대한 유라시아 무역망을 형성하다

글 송병건 성균관대학교 교수(bks21@skku.edu)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이슬람 상인들은 이미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힘든 여정 끝에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하면 알-와시티(Al-Wasiti)의 「마카마트」에 묘사된 카라반세라라고 불리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잠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불편한 자세에도 깨어날 기색이 없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잠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과 왼편 문 앞의 인물이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알-와시티가 이라크의 유서 깊은 오아시스 도시 와시트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인데, 눈을 뜨고 있는 두 사람은 잠든 상인들로부터 조심스레 물품을 빼내고 있다. 몰래 약을 탄 음식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는 소지품을 훔치는 현상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당시 이슬람 무역 상인들이 겪었음직한 위험을 공감할 수 있다. 낙타를 이끌고 험난한 사막을 건너 오아시스 마을에 무사히 도착하면 상인들은 한숨을 돌리며 긴장을 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놓는 바로 그 순간을 위험요소가 노리는 것이다.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낙타가 본격적으로 무역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2세기경이었다. 낙타는 말이나 노새보다 짐을 많이 실었고, 특히 사막을 건너는 데에 유리했다. 황량하고 드넓은 사막을 관통하는 일은 상인들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지만, 대신 사막에는 강이나 밀림이 없어서 이동거리가 짧았고 맹수가 공격할 위험도 없었다. 또한 대기가 건조해 병원균이 퍼지기 어려웠으므로, 상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물건이 변질될 위험도 적었다. 이런 이점들이 상인의 육체적 고단함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대상무역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슬람 상인들이 육로만 이용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홍해와 페르시아 만을 능숙하게 항해하였고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무역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보였다. 이들의 해상 활약상은 대단했다. 이들은 지중해에서 유럽인과 거래한 후 바그다드를 거쳐 페르시아 만으로 향하거나, 카이로를 거쳐 홍해로 들어섰다. 어느 경로든 인도양으로 연결되는데, 그 후에 인도양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에 도달하였고 일부는 동아시아까지 나아갔다. 아바스왕조(750-1258)를 배경으로 하는 신밋드의 모험 이야기는 바다 건너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슬람인들의 깊은 관심과 동경을 잘 보여준다.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가들은 이슬람 사회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상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슬람 통치자들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이교도도 국가에 인두세만 납부하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카라반세라이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또한, 술탄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인과 제조업자 동업조합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상품을 들고 행진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동업조합은 기술을 표준화하고 어린 기술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했지만, 장거리 무역업에 따르는 위험을 구성원들에게 분산하는 보험 역할도 담당했다.

「축제의 책」에서 이런 행사의 예를 볼 수 있다. 이스탄불의 대형 경기장을 묘사하는 이 그림의 왼편 위 쪽에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앉아있고, 오른편으로는 수많은 관객이 세 층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

다. 행진하는 사람들은 방직업자 동업조합의 일원들이다. 이들은 화려한 문양의 상징물과 직물을 받쳐 들고 행진을 하면서 술잔과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국가정책에 힘입어 이슬람 상인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슬람 상인들은 다양한 상품을 거래했는데, 그중에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류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노예였다. 이슬람 상인들은 중부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을 남유럽, 서아시아, 인도양 연안에까지 팔아넘겼다. 노예들은 주로 부유층의 집으로 팔려 가 힘든 노역에 종사했다. 역사적 추계에 따르면 7세기 이래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간 아프리카인의 수가 약 1천만 명에 달했다. 1500년까지 송출된 아프리카 노예를 보면, 2/3가 사하라 사막을 넘어 북아프리카로 보내졌고, 나머지 1/3이 아시아로 보내졌다. 하지만 아프리카인들만 노예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8-9

세기에 이슬람 상인들은 많은 유럽인을 노예로 삼았고, 이후에도 적지 않은 수의 노예를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공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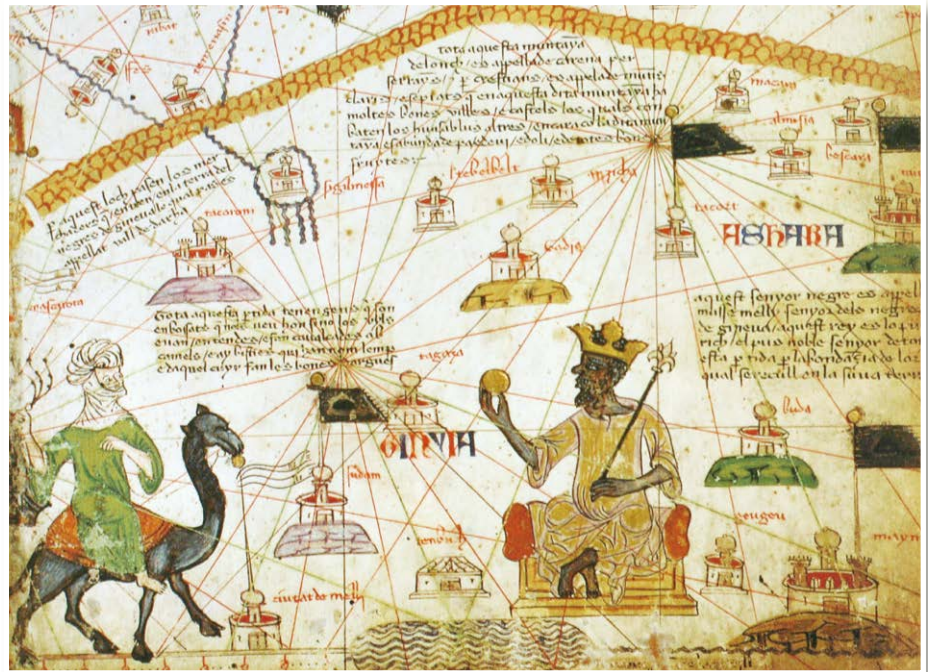
이슬람 경제의 세계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324년에 발생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북 지역은 10-12세기에 대부분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이 종교적 통일은 이슬람 경제권이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3세기에 북아프리카의 중심국으로 등장한 말리 제국은 14세기에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 되었다. 말리제국은 이슬람권 전역에 금을 공급하는 국가로 명성을 떨쳤다.

1324년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만사(황제) 무사는 아라비아반도의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순례행렬에는 1만 2천 명에 이르는 노예가 포함되어 20톤 이상의 금덩이를 수송했으며, 80마리의 낙타가 따로 수 톤의 사금을 날랐다고 한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만사 무사는 순례 중도에 거친 카이로와 메디나에서 빈민들에게 금을 나눠주었고, 그곳 상인들로부터 각종 물품을 비싼 값에 구입했다. 그 결과 이 도시들에서는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개인이 세계적 대도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150년이 지난 14세기 후반에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제작된 지도첩에까지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아브라함



☆☆☆ 『축제의 책』, 1582년.





☆☆☆ 아브라함 크레스크, 『카탈루냐 지도첩』, 1375년.

크레스크, 『카탈루냐 지도첩』). 온몸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황금 덩이를 손에 든 채 왕좌에 앉아 있는 만사 무사의 모습이 낙타를 탄 평범한 이슬람 상인의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세계 최고의 갑부 만사 무사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흔히 이슬람교의 확산과정을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로 묘사하곤 한다. 무슬림에게 정복당한 주민은 이슬람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십자군 전쟁에서 무슬림과 여러 차례 충돌했던 중세 유럽인들이 지닌 반이슬람 정서가 반영된 표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역사에서 이슬람제국은 이교도 피정복민에게 개종을 심하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인두세만 납부하면 이교도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슬람교와 접촉하게 된 지역에서 유력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우선 토착 신앙을 대신해 고등종교를 수용함으로써 정신적·지적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유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력자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광대한 이슬람경제권에 편입된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면 생산과 무역을 확대해 기존에 국지적 규모로만 얻던 이득을 광역적 수준으로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억만장자 만사 무사는 이 예상이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
이슬람제국은
이교도 피정복민에게
개종을 심하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인두세만 납부하면
이교도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 이 글은 『비주얼경제사』(2015)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경제 관료는 최대한 지켜라!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 장관들의 재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인 1987년 이후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임기를 조사해 보면, 평균 427일. 즉, 1년 2개월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는 평균 35개월, 유럽 16개국의 평균은 54개월이다.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과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일이 손에 익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쯤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정책의 효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야 할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임기는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판서들의 임기는 어떠했을까? 성리학을 기반으로 고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조선 시대지만, 전혀 의외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조선 초부터 1719년까지 약 3백 년 동안 이조판서로 임명된 사람은 총 317명.

평균 9개월의 임기였던 반면에 호조판서로 임명된 사람은 이의 절반도 안 되는 146명, 평균 재임 기간은 2년 1개월이었다. 이조판서는 육판서(六判書) 중에서 으뜸으로 관리들의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부서였다(오늘날의 행정안전부). 그렇다면 호조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맡았던 곳이다. 이곳의 장인 호조판서는 오늘날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역할이다. 숫자로만 보면, 명분만 내세우던 시대일 것 같지만, 조선 시대에도 경제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제관료 한 명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검증된 인사를 내친다는 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손해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이해 보다, 국가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놀라운 건 당시에도 경제 관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경제관료를 최대한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광해군, 인조 시절에 호조판서를 지냈던 김신국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다. 광해군 정부는 태생적으로 소수 정부(Hung Parliament)였다. 서인 세력을 배척했고, 같은 북인 세력 중에서도 대북파는 버리고, 소북파만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정권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폐모살제(廢母殺弟 : 인목대비를 폐하고, 그녀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죽인 것)나,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등으로 국내정치의 ‘명분’도 없었다(광해군의 균형 외교가 명나라의 불만을 살 거 같았지만, 명나라는 광해군을 좋게 봤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자 인조를 폐위시키기 위해 군사를 파견할 계획까지 짰던 게 명나라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광해군과 소북파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인조 행정부는 이후의 정권장악과 前 정권 인사의 처벌을 신속하게 해치웠다. 소북파의 숙청이 단행됐다. 처음부터 소수정권이었던 소북파는 광해군 퇴출 이후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이 소북파 숙청 작업에서 유일한 예외가 한 명 있었다. 바로 소북파의 영수이자, 광해군 시절 호조판서를 지냈던 김신국이다. 소북파 인사들은 처형 되거나 귀양 보내던 상황에서 인조 행정부가 고민했던 인물! 인조 행정부는 고민하게 된다.

“그만한 경제 관료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탁월한 성과를 내놓은 인물이 아닌가?”

인조 정부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김신국은 그 목숨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귀양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몇 달 뒤 평안도 관찰사로 정계 복귀 시킨다. 파격적인 대우라고 해야 할까? 평안도는 관찰사 자리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신국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혹시 모를 청(후금)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해 평양성을 증축하고, 군

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김신국은 인조행정부의 기대에 부응했다. 몇 달 만에 평양성을 보수했고, 군량도 넉넉하게 확보했다.

이대로만 가면 중앙정계로 복귀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런데, 또다시 김신국의 정치적 입지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바로 ‘이괄의 난’이었다. 논공행상의 문제 때문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前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괄이 쿠데타! 인조는 몽진 길에 올랐고, 인조행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때 김신국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다.

“평안도 관찰사 김신국이 이괄과 내통해 반란을 사전에 모의했답니다!”

평소 김신국에 대해서 깔끄러운 감정을 가졌던 이들이 들고일어났지만, 사건은 곧 무혐의로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한번 품은 의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으니,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소북파를 끌어안느니 우리 쪽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인조 행정부 내에서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인조 행정부의 최종 결론은 김신국의 활용이었다. 경제관료 한 명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검증된 인사를 내친다는 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손해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이해 보다, 국가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신국은 인조반정으로 호조판서 자리에서 쫓겨난 지 2년 만에 다시 인조 정부의 호조판서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김신국을 자리에 앉힌 인조행정부의 판단은 옳았을까? 옳았다. 김신국은 호조판서 자리에 오르자마자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았으니, 바로 ‘돈의 유통’이었다(세종대왕 시절에 화폐유통에 대한 시도는 있었다). 이 당시에는 화폐의 개념도, 거시적인 화폐유통의 청사진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김신국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한 통화정책을 밀어붙이게 된다. 결국 조선통보를 조선의 법화(法貨)로 만든 김신국은 통화유통에 앞장서게 된다. 김신국의 이런 노력으로 통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조선 사회는 이후 김신국의 뒤를 이은 김육이 호조판서를 역임할 때쯤에는 화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숙종 시절에는 완전한 화폐경제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조행정부 가 인재를 바라보던 안목은 있었던 것이다.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저 자 손병규
출판사 역사비평사
발간일 2019년 07월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이 책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개된 조선 후기의 지방재정사를 통해 조선왕조의 국가재정 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상세한 사료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은 정규의 중앙집권적 재정 부문과 비정규의 지방자치적 재정 부문이 공존했던 사실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으며, 근대국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름의 합리적인 운영원리가 장기간 존속해온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을 재평가한다. 이 책을 통해 조선 후기의 재정사 연구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한국사의 전통과 근대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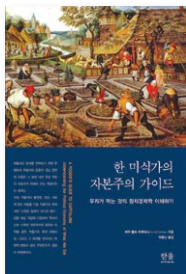


저 자 이 근, 김상배, 김준연,
임지선, 최준용, 이주호,
박태영, 오 철
출판사 21세기북스
발간일 2019년 07월

디지털 사회 2.0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이 책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세계화 4.0'이라는 화두에 대해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 경제의 변화를 조망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화 4.0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상징하고, 새롭게 시작된 인간 중심 디지털 사회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정의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인간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물적 능력을 보완 시켜 고도화된 인간들이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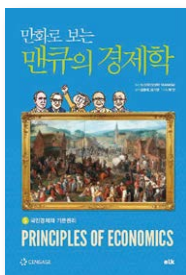


저 자 에릭 홀트 히메네스
옮긴이 박형진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발간일 2019년 07월

한 미식가의 자본주의 가이드

우리가 먹는 것의 정치경제학 이해하기

이 책은 먹을거리 체계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는 책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가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역사를 살수하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먹을거리가 자본주의화되면서 유발된 각종 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습한 정치경제학의 교훈을 해결책에 적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먹을거리 체계를 틀 짓는 방식과 먹을거리가 자본주의의 구조와 기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저 자 N.Gregory Mankiw
편 저 김용석, 김기영
그 림 채안
출판사 이러닝코리아
발간일 2019년 07월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5

국민경제의 기본원리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맨큐 교수가 저술한 '맨큐의 경제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화로 풀어 저술했다. 5권에서는 국민경제의 기본원리를 주제로 국민소득의 측정방법,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인플레이션 측정 방법,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융제도와 저축,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 및 재무이론의 기초를 다룬다. 이 책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튀니지 공공행정 분야 공무원 경험전수



한국재정정보원은 7월 4일(목), 튀니지 총리실 및 공공행정 곳거버넌스 반부패부 공무원 22명과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dBrain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했다. 이번 경험전수는 한국어-불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튀니지 공공행정 분야 연수단은 6월 17일(월)부터 7월 7일(일)까지, 총 21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선진국의 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 심층적인 교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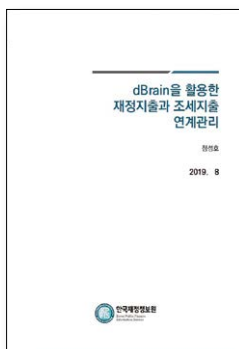
2019년도 제1차 보안자문위원회 개최



정보보호본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발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7월 16일(화) '2019년도 제1차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안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지속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자문위원회를 정례화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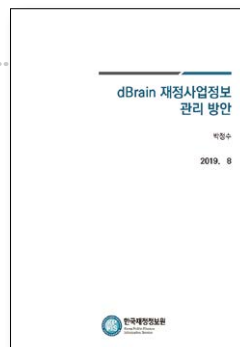
신간 분석보고서



◀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 정성호 연구위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므로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한 축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재정 및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두 지출 간 연계 정도 검토를 통해 체계적 연계관리를 위한 수단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수단으로는 템플릿(template) 및 dBrain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 박정수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dBrain을 통해 재정사업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재정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해외 주요국 사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한 뒤 세부사업의 요약정보인 속성정보의 분류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포털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매년 정부가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처럼 재정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긴다면 재정통계와 맞춤형 재정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열린재정>은 예산, 집행, 결산 등
다양한 재정통계를 비롯하여 연구자, 일반인 등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
재정정보 공개포털로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4년 넘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8년에는 제공통계 확대, 시각화·접근성 향상 등 포털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별·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제공하고 키워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나. 일별·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정보공개 확대 노력으로 2018년 7월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매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국가재정법」시행령 제5조). 이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열린재정>을 통해 일별·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공개해 왔으며, 국방부, 우정사업본부 등 업무특성 상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도 올해 7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즉 <열린재정>에서 세부사업과 관련된 유용한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 키워드 검색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통합검색기능에 '키워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되었다. 통합검색 시 사업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해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행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재정사업이 궁금한 경우, 포털 내 검색 창에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자세한 사업설명 자료의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애 독 자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예산, 집행, 결산 등
다양한 재정통계를 비롯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재정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정보공개포털 이름은?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9. 08. 26. ~ 2019. 09. 11.

POSTCARD



7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지방재정조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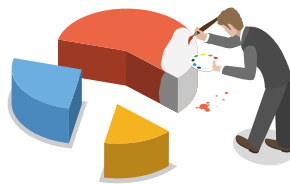
☆ 상품 당첨자 ☆

bps**@hanmail.net
hya*****@nate.com
kyh*****@sbculture.or.kr
his*****@gmail.com
ddp*****@gmail.com
yjc*****@yahoo.co.kr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쿠폰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책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존재와 위상을 새삼 실감해봅니다.
“하반기 경제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관해 기사를
도표와 수치를 통해 접하게 되니 이해가 쉽게 되는 듯싶습니다.
특히, 10대 중점 관리과제에 관심을 더욱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책자로
자리매김해주세요.

bp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